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박병열 부연구위원

- 양국은 2030년 교역 500억 달러 확대에 합의하고 공급망·신산업 중심 협력을 추진
 - 전략산업 중심 협력 확대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 협상 재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은 한-인도 협력의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기존 협력 채널의 파편화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협력에 특화된 범정부 협력 플랫폼 구축
- 이번 회담은 한-인도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평가
 - 전략 자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생산·기술 기반 협력 구조 전환
-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로, 무역적자 민감성은 통상 협상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화 및 중간재 현지화 추진 필요
-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제도 개선 필요
 - 복잡한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절차로 협정 활용 제약 존재
 -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 및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 ODA와 산업협력 간 연계 미흡으로 협력의 실행력 제약
 - 협력 방식의 유연성 제고 및 개발협력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핵심 주제어: 한-인도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산업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9~20일 인도를 국민 방문하여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 이번 방문은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8년 만의 인도 국민 방문으로, 이는 한-인도 간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반영
 - 경제사절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효성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 간 협력을 민간 투자 및 사업 협력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인도 방문에 이어 베트남 국민 방문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인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경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항만 협력,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협상 재개 공동선언, △문화창조산업 협력,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중소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교류계획서, △체육 협력 △철강 협력, △파리협정 제 6.2조 이행, △기후·환경 협력, △해양문화유산 협력, △금융중심지 활성화, △QR코드 결제 연동 등 총 15건의 MOU 문건 채택¹

양국은 경제·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500억 달러 확대에 합의²

- (경제협력 고도화) 양국 간 경제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창출
 - (경제협력 플랫폼 신설) 장관급 협의체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무역·투자, △핵심광물, △원전, △청정 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원자재 협력)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지속
 - (CEPA 개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통상 규범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선하여 2027년 타결 추진
 - (중소기업 협력)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당국 간 실무협의체 가동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현지 진출 지원 체계화
- (전략산업협력 확대)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한 조선·금융·AI·국방·방산 등 핵심 산업협력 추진
 - (조선)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력과 인도의 조선소 건설 지원, 발주 수요 보장, 생산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연계하여 인도 조선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금융) 금융기관 간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 및 금융·핀테크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AI·디지털) 인도의 풍부한 핵심 인재 풀과 한국의 ICT 인프라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
- (문화·인적 교류 확대) 문화·교육·디지털 결제 등 국민 체감형 교류 기반 강화
 - (문화산업협력) '뭄바이 코리아 센터' 조성을 통해 K-컬처 해외 거점 구축 및 문화 협력 확대
 - (한국어·학술 교류) 현지 한국어 및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도 내 한국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
 - (전자결제 연계) 양국 간 QR 결제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결제 편의성 제고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지원
- (글로벌 현안 공조)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소통 지속
 -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¹ 한국경제(2026), "韓-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공동선언' 등 MOU·협력 문건 15건 체결", 4월 20일.

²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을 바탕으로 작성.

〈표 1〉 한-인도 정상회의 주요 합의 내용

	핵심 협력 내용
경제협력 고도화	-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총괄 - (한-인도 CEPA 개선) 신통상 규범 반영 및 2027년 타결 추진 - (에너지·원자재 협력)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진출 지원) 대사관-인도 규제당국 간 실무협의체 가동
전략산업협력 확대	- (조선)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정책 지원 연계 - (금융·핀테크) 금융기관 진출 기반 마련 및 규제 협력 - (AI·디지털) 인재·ICT 인프라 연계를 통한 디지털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 (문화 거점) '뭄바이 코리아 센터' 조성 및 K-컬처 확산 - (교육 협력) 현지 한국어 및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 - (디지털 편의) QR 결제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
글로벌 현안 공조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전략적 소통 - (공급망 안정) 글로벌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인식 공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인도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적 의미

- (인도의 부상) 고성장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생산기지이자 유망 시장으로 부상
 - 인도는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2024년 3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경제로 부상
 - * 향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일본·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기준 약 14억 5,000만 명의 인구와 4억 명 이상의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 보유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확대

〈표 2〉 주요국 경제지표(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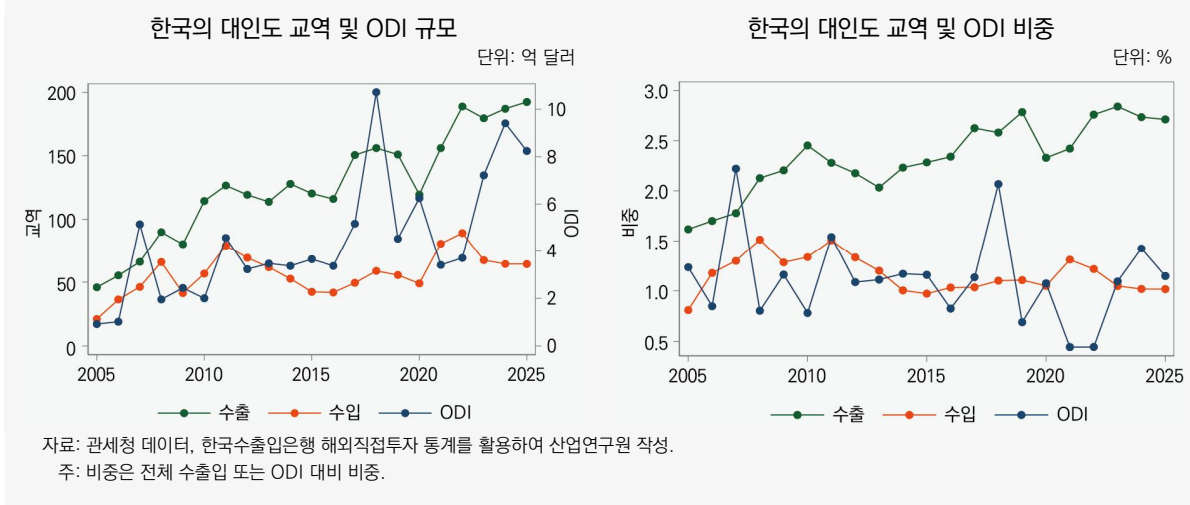
	인구 규모 (백만 명)	경제성장률 (%)	명목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상품교역 (십억 달러)
인도	1,451	6.5	3,910	2,695	1,132
한국	52	2.0	1,875	36,239	1,315
일본	124	0.1	4,028	32,487	1,450
중국	1,409	5.0	18,744	13,303	6,162
미국	340	2.8	28,751	84,534	5,421

자료: World Bank,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 (수출 다변화의 핵심 대상국) 수출시장 편중 구조 완화를 위한 인도의 전략적 가치 확대
 -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 이후 적자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탈중국 흐름이 가속화되는 등 기존 주력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2025년 대미 수출 감소 등 주요 시장 의존 구조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4년 상위 10대 수출국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71%를 기록하는 등 수출시장 편중 구조 심화³

3 심혜정·노희선(2025),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5년 25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그림 1〉 한국의 대인도 교역 및 직접투자(ODI) 추이



- 주요국이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인도 교역 비중은 3% 미만, 투자 비중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 상황

•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제조업 유치 정책을 통한 생산거점 구축 전략 강화

- 2014년 'Make in India' 도입 이후 투자 절차 간소화,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추진
- 2020년부터 시행된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통해 모바일,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유도
- 최근 IT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 PLI 2.0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급망 내재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은 한-인도 협력의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규제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정부 간 협력 필요성 증대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규제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민간 기업의 독자적 대응 여력이 점차 축소
- 인도의 불투명한 규제 관행으로 우리 기업의 장기적 사업 계획 수립이 제약되고 있으며, ESG 규제 및 표준 정합성 등 단일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가 확산
-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협력의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 증대

• 기존 협력은 파편화된 구조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산업협력 체계로 기능하지 못한 한계 존재

- 과학기술, 국방 등 일부 분야에서 개별 협력 채널이 운영되어 왔으나, 부처별·분야별로 분산된 구조 지속
- CEPA 공동위원회,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등 통상·외교 중심의 일부 채널만 제한적으로 가동되어 산업협력에 특화된 정례 채널은 사실상 부재
- 이에 따라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미래 유망 산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포괄적 대화채널이 미흡했던 상황

〈표 3〉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채널 현황

협력 채널	설립 시점	최근 회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2002년	2013년 9월(4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2002년	2024년 3월(10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2006년	2017년 6월(5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2010년	2024년 6월(11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2018년	2019년 9월(2차)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2023년 10월 제안	

자료: 박병열·강지현·김정현·이교은(2025), 「지속 가능한 철강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산업협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5-24,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 산업협력위원회는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서 협력 발굴 및 규제 대응을 포괄하는 기능 수행 기대
 - 인도의 중장기 산업정책 기조와 유망 산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높은 협력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
 - 규제 대응, 현지 투자 애로 해소, 공급망 협력 등 복합적 통상 현안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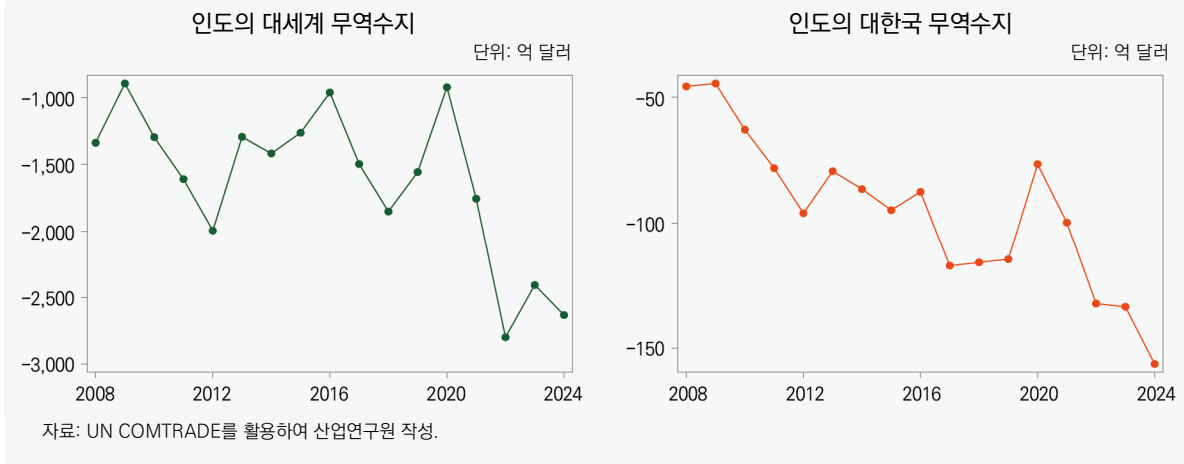
이번 회담은 한-인도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 협력 구조의 고도화 및 제도화
 - 기존의 한-인도 협력은 교역 및 투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광물, 에너지, 원전, AI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포함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단순 시장 접근을 넘어 생산·공급망 기반 협력으로의 전환
 - 핵심광물, 에너지 등 전략 자원 공급망 공조를 통해 대외 충격 대응 역량과 경제 안보 차원의 협력 기반 강화
 -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단발성 협력을 넘어 정례적·구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이는 단순 협력 분야 확대를 넘어 생산·기술·자원이 결합된 다층적 협력 구조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
- 미래 신산업 중심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조선, AI, 방산,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시장·인력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결합함으로써 단순 제조 협력을 넘어 미래 산업 중심 협력 추진
 - 산업협력 확대와 함께 문화·교육·인적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과 네트워크 강화
 - 전자결제 시스템 연계 등 디지털 인프라 협력과 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해 국민 체감형 편익을 제고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구축
 - 이번 국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 확장을 넘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인도는 무역수지 개선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협상의 핵심 제약 요인
 - 인도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비전하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
 -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시장 개방 및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을 주요 고려 요소로 반영하는 경향
 - * 인도의 대세계 무역적자는 2008년 1,333억 달러에서 2024년 2,63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대한민국 무역적자 역시 같은 기간 46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증가
 -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11차 회의까지 장기간 지연된 배경에는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CEPA 개선 가속화에 합의하였으나,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호혜적 산업협력 방안 마련 필요

〈그림 2〉 인도의 무역수지 추이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화 및 중간재 현지화 추진
 -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본국 중간재 수입 → 현지 가공 → 내수 판매' 중심 구조는 대인도 무역적자를 심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세이프가드, 품질인증제도(BIS) 확대 등 인도의 보호조치 강화의 근거로 활용

〈표 4〉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산업별 교역 현황(2025년)

단위: 백만 달러

무역적자 산업				무역흑자 산업			
산업	수출	수입	수지	산업	수출	수입	수지
반도체	38	4,457	-4,418	통신기기	4,253	1,840	2,413
철강	5	1,726	-1,722	자동차	3,131	1,243	1,888
가전	78	1,136	-1,058	의류	42	1	41
디스플레이	13	784	-772	가구	49	24	25
전기기기	117	672	-555	의약	19	6	12

자료: S&P Global IHS Markit, Moody's Orbis Database, 산업연구원 ISTANS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 인도 내 생산기지를 내수 공급용을 넘어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체제로의 전략적 전환 필요
- 단기적으로는 GCC(걸프협력회의) 및 아프리카 등 인접 신흥 시장을 타깃으로 자동차·통신기기 등 주요 생산 품목의 역외 수출 확대 추진 가능
- 장기적으로는 인도 내 부품·소재 생태계의 성숙 수준에 맞춰 중간재의 현지 조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 필요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행 원산지 기준 및 복잡한 인증 절차는 협정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한-인도 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기준(CTH)⁴+역내부가가치(RVC)⁵ 35%’의 병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협정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 발생
 - * 일부 품목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적용되어 일반 기준보다 높은 부가가치 기준을 요구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 지연, 복잡한 직접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우리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현행 누적기준은 한국-아세안-인도 간 생산 네트워크 활용을 제약**
 - 아세안 역내 가치사슬을 활용한 부품·소재 조달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인도 CEPA는 한국-아세안-인도 간 생산 연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양자 누적 구조 유지
 -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아세안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인도에서 최종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이 제한되어 협정 활용에 제약 발생
 - 아세안과 인도가 AITIGA 개정 협상에서 공급망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아세안-인도 간 3자 누적 기준 확대는 역내 경제 통합 흐름에 부합하는 과제
- **신산업 분야 분류체계 및 제도 미비에 따른 협정 활용 제약**
 - 최신 국제기준(HS 2022)과 기존 분류(HS 2012/2017 등) 간 구조적 차이에 따른 품목 간 매칭 및 해석상 혼선으로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사례 존재
 -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 원산지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유연하게 설계하여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부가가치(RVC) 중 하나만 충족해도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필요
 - 한-아세안-인도 간 3자 누적 또는 RCEP 수준의 다자 누적 체계를 도입하여 생산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필요
 - HS 분류체계를 최신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세관 당국 간 사전판정 제도의 상호인정 및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 간 해석 차이 최소화 필요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정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수출품의 HS 코드가 원재료의 HS 코드와 일정 수준 이상 달라야 하는 요건.

5 생산 과정에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 한국의 대인도 공적개발원조(ODA)는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협력과의 연계는 제한적
 - 한국은 2021년 인도를 신규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지역개발·스마트시티,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환경, 그린에너지, ICT 등을 중점협력 분야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협력 기반 마련
 - * 대인도 ODA 지원 규모는 2018년 62만 달러에서 2024년 4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이나, 여전히 절대적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
 - 현재 ODA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산업협력 및 기업 진출과의 연계는 미흡
- 글로벌 개발협력은 경제안보 및 산업 전략과의 연계 강화 추세
 - 최근 글로벌 ODA는 전통적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자국 공급망 구축, 인프라 수주, 전략산업 진출 등 경제·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⁶
 - 주요 선진국들은 ODA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를 지원하고,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결속력을 강화
 - 우리 정부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K-ODA'를 제시하고, 개발 협력을 단순 원조를 넘어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 제시
- 개발협력을 산업협력과 연계하여 협력 범위 확대 및 실행력 강화 필요
 -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도 국영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정책금융 활용, 삼각개발협력 등 협력 방식의 유연성 제고 필요⁷
 - 인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산업협력 확대에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ICT·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과 연계한 구체적 사업 발굴 필요⁸
 - 개발협력을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및 산업협력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사업 효율성과 협력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⁶ 임소영·빙현지(2026),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04호, 산업연구원.

⁷ 김경훈·김도연·김소은·남유진·백종훈(2024),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2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⁸ 김경훈·한형민·강반디·김민희·남유진·박병열(2025),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2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자

박병열 경제안보·통상연구실 부연구위원 | bypark@kiet.re.kr | 044-287-3089